

◎ 토론 거리(발표문):

임재홍(방송대 법학과),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육성정책에 대한 비평”

◎ 발표문의 요지

<1.~7.2>(거꾸로 읽기)>

○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육성정책: “신자유주의의 인력정책(?)” = 목적 내지 주안점은 ‘산업인력의 양성과 공급’이고, 기본적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혁신 플랫폼’을 이어받아 그것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을 확산하는 한편 거버넌스와 재정 부분의 변화를 추가한 것임. 거버넌스 변화의 요지는 고등교육 관련 의사결정(중앙정부 정책 수립·집행 및 국립대와 비수도권 사립대의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넓히는 것이며, 재정 변화의 요지는 지역 자원(특히 초·중·등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임.

○ 윤석열 정부 이전의 움직임(흐름): 김영삼 정부의 고등교육시장화(대학설립자유화), 노무현 정부의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한 자립형 지방화(신자유주의적 지역혁신+지방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국립대학 사립화 및 사립대학 상업화)’, 박근혜 정부의 ‘대학평가 제도(유사시장정책)’,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신자유주의적 지역혁신+지방균형발전=지역혁신플랫폼)’.

○ 국제적 배경: 대학을 기업활동이나 산업계에 연관시키려는 시도(대학의 기업화)들의 타협 결과물로서의 ‘지역혁신체계(RIS)’(영국의 ‘법제를 통한 기업 협력구조’와 미국의 ‘대학 영리화(+다양한 공공적 기여)’).

○ 우리나라 대학의 성격: 지식의 공공성을 전제로(?) 대학의 공공성을 불완전하지만 인정하는 법제.(★ “지식의 공공성과 달리 대학 자체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딜레마” ⇒ 질문: 무슨 뜻인지?)

<7.3>~8.(순차로 읽기)>

○ 산업인력정책의 근간 사고: ‘지식기반 경제’→‘학습 경제’ / 대학은 ‘체계화되고 상품화된 지식과 인적 자본 생산’+‘지역 네트워크와 지식의 흐름 구축·유지’+‘글로벌 네트워크 연결’.

○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쟁: 기업형 대학이나 기업가적 연구중심 대학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런 대학의 역할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성공 사례는 많이 노출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시장 주도 프로세스와 스페터주의 기업가적 노력의 결과로 그려지며(여전히 논란거리), 실패한 경우는 거의 조명을 받지 못함.

○ RIS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공공 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혁신 시스템 제안(필요하다는 뜻 아닌지? ← ★ 질문).

○ “여전히 지켜져야 할 가치”: ‘지식 생산·보급을 통한 사회 발전 전반에 대한 기여’와 그를 위한 ‘학문의 자유’ 및 ‘자치와 자율’.

○ 대안적 접근: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전제(기본?)로 해서 추가적인 사회 기여(특히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 극복) 방식을 모색해야 함. 복합적 목적(교육·연구 여건 개선+사회적 책임(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사회발전 기여) 수행+대학서열체제 완화)의 사업 전개 필요 ← 사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필요.

◎ 토론

○ 간단 질문 2가지: 앞의 ★표.

○ 발표문에 동의하는 바: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지역발전 방안 기획”, “여전히 지켜져야 할 가치(전반적 지식 생산·보급, 자유·자치·자율)”,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 극복”, “사회와의 적당한 거리 두기”,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 부족”.

○ 이 ‘동의하는 바’에 대해 ‘또 달리 말해보기’

= [“지켜져야 할 가치”] 대학의 존속 이유(기본적·통상적 역할, 기능, 필요성): 기존(+과거) 사회·지식(학예) 점검·반성·비판(교원+(연구원)+대학원생) ⇒ 현존(타당·유용) 사회·지식(학예) 지지·전수·확산(교원→학부생)+학령기 인구 수용 ⇒ 미래 사회·지식 전망·선도·개척(교원+(연구원)+대학원생). // 이러한 이유·역할·기능·필요가 곧 대학의 ‘공공성’의 내용 아닌가? // 이러한 이유·역할·기능·필요를 ‘잘’ 채우려고 대학과 그 학예 활동의 자유·자율성·자치를 보장하는 것 아닌가?(특수 목적을 위해 인정하는 자치: 공공 재정 지원과 운영 자율성 보장 / ※ ‘주권’에 기반한 자치(재원 차체 조달)와 대비됨).

= [“실증 연구 필요”,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 극복”, “사회와의 적당한 거리 두기”] 위 이유·역할·기능·필요에 맞춘 우리나라 대학의 현 상황 점검: 교원(충원률과 수(총인구 대비 비율))과 시설, 학부생 수(진학률·재학률·졸업률), 대학원생(진학률·재학률·졸업률), 공간적 분포의 균형, 분야별 구성과 분포의 균형, 수준별 구성과 분포의 균형, 자유·자율성·자치, 재정 지원 — 충분한가? ⇒ 실증 연구 필요.

= 한국의 특수 문제 1(국제적 존립 조건): 세계 4대 강국 사이에서 ‘존속’하며 ‘발언권’을 확보해야 함(‘선진 강국’으로 존속해야 할 필요성) ⇒ ‘지식기반(학습) 경제’ 고도화(+인권 보장 증진을 통한 도덕적 우위 확보) 필요 ⇒ ‘지식 보유·창출 인구’의 규모(수와 비율)를 주변국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유지(←증대)해야 함 ⇒ 대학 교원과 대학원생의 수나 비율을 ‘자유 시장 상황’보다 더 크고 높게 ‘인위적으로(무상교육과 재정지원 증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국의 특수 문제 2(지역간 불균형과 사립대학의 비중): 국립대학은 대다수가 ‘지방’에 분포, 사립대학의 지역간 편중은 국공립보다 적음, 지방대학은 (이른바 ‘서열’이나 평판 및 교육여건에 따라) 학생 충원과 재원 조달이 점점 어려워짐 ⇒ 공공 자원 투입 조정(국공립 지원 증대와 사립 지원 축소 → ‘국가교육책임제’의 ‘적정 시행’(?)과 사립대의 자립·자율 강화)과 제도 변환(지방 사립대의 국공립 전환 유도(교원과 학생 승계, 시설 전용 허용 등) 동시병행을 통해, 적어도 지방은 국공립 위주 역량 강화를 해나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정답’ 아닌가?

= 기본(기초)과 혁신(첨단)의 관계: 기본 없는 혁신 가능한가? → 기초 학예의 ‘인위적 부양’ 필요하지 않나? → 그렇다면 기본 보강과 혁신 추구를 동시에 병행해야!

[[끝]]